

광주 내년부터 고교 2학년도 무상급식

시·의회·교육청 합의…늘어난 비용 시·자치구 분담

2만여명 추가 혜택…내후년에는 고교 1학년도 포함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광주시교육청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2학년까지 확대·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교 1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광주의 모든 초·중·고교생이 지원을 받게 됐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은방 시의회 의장, 장휘국 시교육감은 15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광주지역 67개 고교생 2만여 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기존 무상급식 대상자인 초·중학생 전체 및 고등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까지 포함하면 17만6000여 명이 급식 지원을 받는 셈이다.

광주시 등은 내후년에는 현재 제외된 1학년도 지원 대상에 넣을 계획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늘어난 비용은 식품비의 70%를 시와 자치구가 나눠 부담하기로 했다. 내년 추가 부담액은 66억7000만원이다.

무상급식비로 투입하는 연간 예산은 시 교육청 1천71억원, 시와 자치구 514억원

등 1천585억원에 달한다. 조리원 등 인건비와 식품비가 각 48%와 4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운영비는 6% 가량이다.

교육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를 뺀 시 교육청의 교육 관련 전체 사업비가 3천억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무상급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쉽게 알 수 있다.

앞서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광주시청에서 ‘2017 광주시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고교 무상급식 단계적 시행과 사업비 분담비를 조정 등을 논의했지만, 협의에 실패했다.

당시 광주시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

권대회’ 준비와 ‘지하철 2호선 건설’ 예산 부담 등이 크다면서 시교육청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윤 시장은 “광주시는 물론 교육청도 예산상 어려움이 많지만 시정의 목적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치라는 점에 동의해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와 교육청은 향후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많은 재원이 필요한 만큼,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앞으로도 무상급식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 학교급식 납품 소고기

무작위 검사 결과 모두 한우

전남지역 학교급식에 납품된 소고기는 모두 한우로 확인됐다.

전남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달 전남 13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납품된 소고기 33건을 무작위 수거해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모두 한우로 판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동물위생시험소는 한우 판별검사를 통해 도축검사 증명서나 등급판정서 상에 적힌 품종과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한우 판별검사는 소의 품종·개체 간 차이를 나타내는 유전자형을 확인해 한우 여부 판단, 암수 구분까지 가능한 분석법이다.

김상현 전남동물위생시험소장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소고기에 대해 유전자는 물론 성분·규격·미생물 등을 검사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음식점 가건물 화재

15일 오후 광주시 동구 대의동 한 음식점 3층 가건물에서 불이 나 119 소방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다. 가건물은 비어있었고 당시 음식점에도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나명지기자 mjna@kwangju.co.kr

5·18 암매장 조사 땅속탐사레이더 투입

옛 광주교도소·너릿재서 실시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지 조사에 땅속 탐사레이더(GPR·Ground Penetrating Radar)가 투입되며 새로운 전개를 맞았다.

15일 5·18재단, 5월단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GPR을 이용한 조사가 광주교도소 부지와 광주~화순간 너릿재 도로에서 진행됐다. GPR은 주파수로 땅속을 투시해 토양의 이상 유무를 살펴볼 수 있는 레이더다.

재단은 차량에 설치된 대형 탐사레이더 2대와 사람이 들고다니는 소형레이더 1대를 투입했다. 이날 교도소 북쪽 부지콘크리트를 제거한 구역은 차량에 연결된 대형

탐사레이더를 활용해 땅 속에 암매장 흔적이 있는지 살폈다. 담당 바로 옆 콘크리트를 제거하지 못한 곳은 소형 탐사레이더가 투입됐다. 또, 경찰의 협조 아래 도로를 차단하고 화순쪽 옛 너릿재터널 인근 도로와 너릿재공원도 조사했다.

재단은 레이더 조사 결과를 분석해 땅속 이상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문제로 잠시 중단됐던 암매장 발굴은 이날 옛 교도소 북쪽 담장 주변 1구간 추가 조사와 2구간 기초 굴착을 시작했다. 1구간 추가 조사 지역은 이르면 이달 16일께, 2구간은 18일께 암매장 정황이 확인될 전망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조영표 시의원 2심도 집유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임주혁 부장판사)는 15일 알선수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8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

게 된다.

재판부는 의원 직위를 이용,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알선과 청탁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유죄로 본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그러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1심처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의원은 구청과 남구보건소에 특별교부금을 내려주고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2013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7300만원을 정권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또 고교 동창과 함께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남구 모 사립학교 채용을 대가로 7명으로부터 1인당 8000만~1억원씩 총 6억 2000만원을 받아 일부를 정권 혐의(사기)를 받아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성추행 혐의 건설사 회장

22일만에 경찰 조사 응해

본인이 고소한 공갈 혐의 조사는 7일동안 3차례 출석

3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광주지역 중견건설사 회장(광주일보 11월 14일자 6면)이 고소장이 접수된 지 22일만에 경찰 조사에 응했다. 이번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공갈·협박사건 피해자라고 억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를 수차례나 방문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15일 광주서부경찰 등에 따르면 중견 건설업체인 G사 P회장은 지난달 23일 광주시 서구 D일식집 주차장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 2명의 신체 일부를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추행 사건 이를 뒤인 지난달 25일 광주해바라기센터에 피해 진술서를 작성·제출했으며, 해바라기센터는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해당 사건의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이다.

접수된 진술서에 따르면 P회장은 지난달 23일 오후 2시~4시께 D일식집에서 만난 여성 일행 4명과 합석한 뒤 술을 곁들여 식사를 했다.

이후 P회장은 인근 커피숍에 가려던 여성 2명이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 중앙 자리에 앉은 뒤 양 옆에 앉아있는 여성들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현재 해바라기 센터에 접수된 진술서를 토대로

P회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수사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P회장이 회의 등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20여일 동안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P회장에게 연락을 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업무일정 등으로 아직까지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P회장은 “지난 9일 성추행 여성 일행이 자신을 협박해 현금 5000만원을 건넸는데, 5억원을 추가 요구하고 있다”며 서부경찰서를 방문해 고소 의사를 밝힌 뒤 다음날인 10일 서부경찰서를 재방문해 녹취록과 함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후 6일만인 15일 P회장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성추행 피해 여성의 내연남인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동안 성추행과 관련해 경찰 출석을 미뤘던 P회장은 김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15일 서부서 형사과에서 공갈혐의 피해 2차 조사를, 오후에는 여성청소년계에서 처음으로 성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피해 여성들이 고소장을 접수한 지 꼭 22일만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지하철 몰카’ 현직 판사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의혹을 받는 현역 국회의원 아들 A 판사가 약식기소돼 법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중희 부장검사)는 15일 A 판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A 판사가 초범이고 촬영 피해자가 A 판사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 제반 양형 자료를 종합해 통상의 양형기준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아당 중진 의원 아들인 A 판사는 7월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이 A 판사를 경찰에 신고해 지하철 역사에서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직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재판형(벌금·과료)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약식 절차에 의해 재산형을 부과하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연합뉴스

호기심에…대학생이 편의점서 일본제 콘돔 ‘술쩍’



○…광주의 한 편의점에서 호기심에 고가의 일본제 콘돔을 훔친

대학생이 경찰서행.

○…15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김모(23)씨는 지난 9월23일 낮 12시55분께 광주시 광산구 한 편의점에서 주인이 잠시 다른 곳을 보는 틈을 타 카운터에 진

열대 있던 1개당 4000원짜리 콘돔 2개를 몰래 가져갔다.

○…김씨가 훔친 콘돔은 국내 편의점 콘돔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인기제품으로, 김씨는 경찰에서 “일본에서 만든 콘돔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훔쳤다”며 선처를 호소.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태양광, 펜션, 전원주택 부지, 캠핑장, 요양(병)원등, 최고장소 !

- 화순군 동북면 연월리 441-1, 442-2, 5번지 연월리 산 195-2, 7번지
- 임야 및 토지 - 약 30,000평, 주택 1동(53평)
- 약 7000평 토목공사 완료
- 매매 - 30억 (평당 10만원)
- 주인직매 010-3605-5000

